

고소왕, 결석왕, 특권왕

태평로
황대진
논설위원



이재명 대표의 별명이 많은 정치인이다.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그의 별명만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다. 워낙 많아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눠놨다. 긍정적인 것으로는 신을 뜻하는 '갓(God)' 과 이 대표 이름을 합친 '갓재명' '천재명' 등이 있다. 일 잘하고 머리가 좋다는 뜻이다. 연애편지 시원 시원하다고 해서 붙여진 '사이다'도 유명하다.

부정적 리스트에는 '고소왕' '욕설왕' 등이 나온다. 이 대표가 고소한 사람은 동료 정치인뿐 아니라 자신의 친인척, 언론인 등 다양하다. 그러다 무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맞붙었던 국민의힘 후보도 고발했다. 그 후보는 "이분이 성남 시장 하면서 1080명 이상을 고소·고발했다"며 "고소왕 이 이반엔 저를 선택했다"고 했다. '욕설왕'은 성남 시장 때 본인의 형수, 형과 통화하면서 지나치게 심한 욕을 했다고 붙여진 별명이다.

국회의원이 되고 '결석왕' 이 리스트에 추가됐다. 참여연대가 의원들 상임위 출석률을 조사했는데, 국방위에

속한 이 대표가 41%로 꼴찌였다. 이 대표를 제외한 다른 국방위원 15명의 평균 출석률은 95%였다.

대장동 수사 후엔 '특권왕' 이 추가될 것 같다. 이 대표는 검찰에 나갈지 말지, 가면 언제 갈지 본인이 결정한다. 지금까지 4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다. 첫 번째는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한 허위 사실 유포 등 건이었다. 검찰은 서면 질의서를 먼저 보내고 회신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무시했다. 그러자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고, 그제야 5줄짜리 답변서를 검찰에 보내며 "이제 소환 사유가 소

부정적 별명 유독 많은 이 대표 검찰 '황제 출두' 논란까지 특권 쓸수록 본인 왜소해져 포기하면 오히려 기회 올 수도

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FC 사건으로 1차례, 대장동 사건으로 2차례 검찰에 직접 나갔다. 하지만 한 번도 검찰에서 오라고 한 날짜와 시간에 맞춘 적이 없다. 성남FC 건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는 검찰에 "무례하다"고 했다. '소환에 응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는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에 응할 지 물어보라"고 동문서답했다. 대장동 사건 때는 출석 시간을 검찰과 협의하지 않고 당 대변인을 시켜 일방적으로 공지하기도 했다. 유동규씨는 "저 같은 사람들은 조사받을 때 오르면 오고 가

리만 간다"며 "이 대표는 옛날부터 그런 특권 의식을 빼졌다고 했는데, 특권을 너무 쓰시는 것 같다"고 했다.

조사 방법도 본인이 정한다. 일방적 자기주장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 질문에는 답하고 싶은 것만 한다. 밤 9시 이후 조사도 거부한다. 형식상 조사에 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부하는 것이다. 이 대표 말고 검찰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고도 "권력이 없어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가 권력이 없다면 검찰이 부를 때마다 가슴 졸이며 시간 맞춰 나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나.

이 대표는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면책특권도 갖고 있다. 그가 당 대표가 되고 국회는 단 하루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 방탄용이란 말이 나온다. 이제 불체포특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순간이 임박했다. 대선 때는 포기를 공약했다. 특권을 누릴 생각이 없다면 스스로 포기하면 된다. 그러고도 바로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남아 있다. 본인이 결백하다면 특권을 쓰지 않고도 구속을 면할 수 있다. 정치적 입지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질 것이다. 절호의 기회다.

정치 지도자가 특혜를 바라고 특권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 앞에 스스로를 왜소하게 만드는 일이다. 특권에 안주할수록 대통령이 되는 길도 멀어질 것이다.

김준의 맛과 성 [128]

포항 죽도 콩치추어탕



편견을 버리면 자유롭다. 그런데 삶이 풍족할 때보다 부족할 때 자유는 곁으로 다가오는 듯하다. 콩치추어탕을 앞에 두고 한 생각이 든다. 흔히 미꾸라지 상상을 떠올려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상상하지 못했다. 콩치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고등어를 낚기도 하고, 웅어를 이용하기도 했다. 갯벌이 발달한 곳에서는 썩어먹을 이용했다. 사실 추어탕은 들어가는 생선보다 시래기를 먹는 맛이다. 여기에 몸을 추스르는 영양분으로 물고기가 더해진 것이다.

지역마다 양념이 다르고 내려오는 손맛이 더해져 완성된다. 콩치추어탕은 추운 겨울에 먹으면 딱이다. 그릴다고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는 더욱 아니다. 콩치추어탕을 처음 맛본 것은 구룡포에서다. 과메기를 만드는 콩치

가 효자노릇을 시작할 때다. 당시 실제 콩치로 호미곶에 거대한 콩치 조형물이 만들어졌다. 그때 구룡포 주민들이 방문객에게 콩치추어탕을 끓여서 제공했다. 그들은 청어보다 콩치에 더 익숙한 세대들이었다. 그렇게 콩치는 과메기의 주인공으로 자리를 잡았다.

많이 집히는 콩치를 얹어 과메기를 만들고, 시래기를 넣고 국을 끓여 온 가족이 끼니를 해결했다. 이번에 죽도에서 맛본 추어탕은 콩치를 다져 완자를 만들어 끓인 것이다. '콩다추'로 알려져 있다. 식감을 살리면서 국물도 깔끔하게 내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콩치를 다진 완자였다. 어시장에서 경매를 마친 싱싱한 콩치를 이용한다.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뼈째 다져야 하기에 손이 많이 간다. 대를 이어 그 일을 해왔으

니, 안주인의 어깨가 성할 리 없다.

펄펄 끓는 육수에 다진 콩치를 넣어 익힌다. 삶은 시래기는 조물조물 된장 등 밑간을 해서 끓인 후 익힌 완자를 넣어 다시 끓인다. 콩치가 청어를 대신해 포항 음식의 대역으로 등장했지만 이제 주연의 자리를 차지했다. 오히려 다시 등장한 청어가 뽕뽕한 신세가 되었다. 청어세대는 가고 콩치 세대가 중년이 되었으니 어쩌지. 그 사이 안주인의 어깨는 병원 신세를 면치 못하지만 포항의 맛을 찾아오는食客들을 보면 손 칼을 들고 콩치를 다진다.

광주전남연구회 책임연구원

社說

반도체 특위에 전문가 빼고 '위장 탈당' 의원 넣은 국회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 국회 내 유일한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이 빠지고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선임됐다. 이 특위는 여당 7명, 야당 10명,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된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 입법을 논의한다. 한 자리뿐인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몫은 신청서를 낸 의원 가운데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향자 의원을 배제하고 민형배 의원을 선임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장 측은 "양 의원은 국회 산자위에서 역할을 발휘하고 있고, 기존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특위 배정 형평성을 고려해서 선임했다"고 한다. 거짓이자 어불성설이다.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김수완박(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때 민주당은 이 법안에 부정적이던 양 의원을 빼고 그 자리에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박아넣었다. 이 꼼수로 최장 90일이 걸리는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고 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였다. 당시 김 의장도 이 꼼수에 참여했다. 스스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 위원을 맡았다. 최연장자가 위원을 맡는 관례를 이용한 것이다. 그 뒤 민주당 지지를 업고 국회의장 자리에 올랐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는 반도체 등 국가 미래가 달려 있는 첨단산업

과 관련된 제도와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해당 분야의 국내외 흐름을 꿰뚫는 전문가 의원이 있다면 최우선 배정해서 지식과 식견을 공유하고 나라 경제를 위해 더 나은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상식이다. 삼성전자 출신의 반도체 전문가 양 의원은 무소속 신분이지만 지난해 여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아 'K칩스법'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사람이다. 더 이상의 적격이 없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반도체 지원은 대기업 지원'이라는 상투적인 논리만 거둬대면서 법안 논의를 못개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유럽 등이 반도체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도 양 의원이 상정된 반도체특별법은 낙 마다 표류했다. 연말에 겨우 통과됐지만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증원 같은 핵심 내용은 빠졌다. 한국과 경쟁하는 대만의 경우, 반도체 지원법을 발의 두 달 만에 신속 처리했다. 정치적 이권투구에만 매달려 국가 경제는 나 몰라라 하는 우리나라 국회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경제 부총리까지 지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제 정치 인생 마지막 자리에서 나라 전체를 생각해 최선의 특위를 구성할 책무가 있다. 더 이상 무엇을 하겠다고 이 중대한 시기에 반도체 전문가를 제치고 비전문가에게 위장 탈당까지 했던 의원을 임명하나, 실망을 넘어 허를 찌를 수 없다.

구속 이재명 최측근에 "흔들리지 마라", 뭘 지키란 건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작년 12월과 올 1월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치소로 찾아가 "마음 흔들리지 마라"고 했다고 한다. 정 의원은 또 "검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 보라"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중진이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의 최측근들을 교도소로 찾아가 만난 것 자체가 오해를 살 일이다. 더구나 이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며 회유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당시는 대장동과 성남FC 관련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과 진술이 잇따라 나오며 이 대표 소환 조사도 시작된 시점이었다. 정진상과 김용 두 사람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까 봐 입단속을 한 것 아닌가.

정 의원과 정진상씨 측은 "재판 잘 준비하라는 격려의 취지였다" "단지 위로를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알리바이를 만들라" "흔들리지 마라"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을 단순한 격려와 위로로 해석할 사람은 많지 않다. 정 전 실장 등이 받

은 돈이 이 대표 쪽으로 들어가 경선 자금 등으로 쓰였는지 이 대표가 이를 보고받고 알고 있었는지 수사 핵심이다. 이미 '428 억원은 이 대표 쪽 뭉'이란 진술까지 나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측에서 나온 '흔들리지 마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었나.

이 대표 최측근들과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는 그동안 사건 관련자들을 수시로 회유하고 입막음을 왔다. 정진상씨는 검찰 압수 수색 직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전화 걸어 증거 인멸을 위해 휴대전화를 던져 버리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김용씨는 유동규씨에게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을 정도 숨 어 지내라"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 나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다. 사건 조작에 증거 인멸, 도주 종용까지 한 것이다.

김만배씨는 남측 변호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언론 인터뷰를 하자 "이재명과 한배를 땀는데 그러면 어떡하느냐"고 회유했다. 남 변호사가 "이 대표는 관계없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제는 유죄 입막음을 했던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되레 회유 대상이 된 듯하다. 이들에게 '흔들리지 마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지키라는 것인가. 모두 밝혀져야 한다.



김명수 사법부, 재판 지연은 방치하고 법원 권한 강화 논의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판사의 압수 수색 영장 심사 때 재판 관 계자를 직접 만나 심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이 휴대전화나 PC의 전자 정보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 검색어를 미리 법원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모두 불필요한 압수 수색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한다. 검찰은 압수 수색이 기밀 유지와 신속성이 생명인데 판사가 피압수자와 변호인 의견을 들으면 압수 수색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 검색어 사전 제출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일리 있는 반론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검찰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입법 예고했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다. 불필요한 압수 수색을 줄일 수도 있지만 이 제도의 실제 이익은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자와 재판 변호사, 대형 로펌에 돌아갈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부작용도 예상되는 이런 제도를 대법원장 퇴임 직전 무리를 하면서 밀어붙이는 의도가 무엇인가.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 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셀프 방탄'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그간 행적을 보면 억측이라고만 할 수 없다.

지금 한국 사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김명수 사법부에서 일상이 된 '재판 지연'이다. 이로 인해 일반인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반면 청와대 울산 선거 공작, 조국 일가 비리 등 권력형 사건의 피의자들은 재판 지연으로 기존의 특권을 그대로 누리고 있다. 한국 사법부에서 이보다 심각한 국민 기 본권 침해, 사법 불공정 문제는 없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은 이 문제에 침묵한 채 법원 권한 강화만 추진하고 있다.

뉴데일리 newdaily.co.kr

민중입법부·민중사법부 통치 대한민국... 당정분리면 민중통치 국가 된다 (운동권)

대통령만 바뀌었다... 민중통치는 가속중

정권교체 된 게 맞나? 이재명 대통령 되는거 막은 것뿐.

3.8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지휘봉을 어느 쪽이 잡아야 할까? 선명한 자유주의 노선인가, 이도 저도 아닌 양다리 걸치기인가?

민중민주주의 혁명의 실태

문재인 5년 동안, 주사파는 자유대한민국을 민중민주주의로 뒤집었다. 입법부가 민중입법부, 사법부가 민중사법부로 바뀌었다. 경찰 총경들은 대통령 시책에 대항하고 나섰다. 이게 나라인가?

민중입법부

2020년 4.15 총선을 기해 원내 절대 다수당이 된 운동권은 각종 위헌적 악법들을 강행 통과시켰다.

@검정수사권조정법: 경찰 도구화 법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야당 난립(亂立) 책이다.
@공수처법안: 중국 공안(公安) 같은 발상이다.

@ 남북관계발전법: 김여정이 명한 대북 전단 금지법.

이런 악법도 대기중이다.

@ 방송 영구장악법: 나치 게벨스가 떠오른다.
@ 이재명 방탄법: 입맛대로 검사 고르겠다는 것.

@ '곽상도 아들 50억 원'에 무죄를, 윤미향에게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 좌(左) 쪽 피고에겐 불구속 재판을, 우(右) 쪽 피고에겐 구속 재판을 하곤 했다.
@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조국 사건을 무한정 오래 끌고 몽쳤다.

당(국힘)·정(윤석열) 분리론은 틀 벗리기 책략 → 정권 힘빼기 → 총선후 '제2 촛불정변'

대통령중심제 책임정치, 美·佛 당정 관계 살펴봐야 바이든은 총선 지원 유세, 마크롱은 집권당 명예당수

민중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과 더불어 사법부 독립은 퇴색하고, 민중사법부, 사법 운동권이 출현했다. 그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장악한 민중사법부는,

자유민주 국민의 사명

이 시대 자유민주 국민은 위와 같은 민중입법부-민중사법부-주사파 혁명을 분쇄해야 한다. 자유대한민국을 되살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주사파와는 협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부터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당정분리보다 당정 협조가 더 시급한 국민

국민의힘 '반윤' '비윤'과 일부는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에 관여하지 마라"라고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체계에서 배제되면, 국민의힘은 지리멸렬 해질 것이다. "당정 분리만이 민주화다"라고 할 수는 없다. 당정 분리나, 당정 협조나, 절대적 개념 아니다. 지금은 당정 협조가 더 시급한 국민이다. 선명하고 투명한 자유주의 국민의힘인가, 불투명하고 향도력(向導力) 없는 국민의힘인가? 이 선택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합령으로 2월 14일 게재 되었습니다.